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터키

Republic of Turkey

2019년 9월 27일 | 팀장(G2) 오경일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784천 km ² 	인구 8,302만 명 (2019 ^f) 	정치체제 대통령제 	대외정책 친서방, 친아랍 균형외교 
GDP 7,062억 달러 (2019 ^f) 	1인당GDP 8,507달러 (2019 ^f) 	통화단위 리라 (Turkish Lira) 	환율(U\$기준) 5.71 

- 터키는 한반도의 3.5배에 달하는 국토면적과 유럽에서 두 번째로 많은 8,302만 명의 인구(2019년 추정)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과 아시아의 접경지역인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음.
- 입지조건과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제조업이 발달하였으나 단순 조립생산 중심의 저부가가치 제조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높은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경상수지 적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미국인 브룬슨 목사 구금으로 인한 외교적 갈등으로 미국이 2018년 8월 단행한 대 터키 경제제재의 여파로 경제성장이 급격히 둔화된 데 이어 에르도안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고조에 따른 리라화 가치 불안과 투자심리 위축이 터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정의개발당(AKP)이 2002년 집권 이후 현재까지 정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에르도안 대통령이 헌법 개정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독재 정치를 추구하여 야권의 반발을 초래한 결과 2019년 3월의 지방선거에서는 앙카라, 이스탄불, 이즈미르 등 주요 지자체장직을 야당이 석권하였음.
- 에르도안 대통령의 독단적인 외교정책으로 미국, EU와의 관계가 냉각된, 반면 최근 러시아, 이란과는 군사/경제적으로 서로 밀착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57. 3. 8. 수교 (북한과는 2001. 6. 27. 수교)

주요협정 사증면제협정('72년), 무역증진 및 경제기술협력협정('77년), 이중과세 방지협정('86년), 투자보장협정('94년), 섬유협정('97년), 원자력 평화적 이용협정('99년), 자유무역지대 창설 기본협정, 관광협정, 상품무역협정('13년), 사회보장협정('15년)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6	2017	2018	주요품목
수출	5,385,010	6,154,872	5,980,358	철강판,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수입	742,405	781,802	1,188,879	농약 및 의약품, 자동차부품, 의류

해외직접투자현황(2019.6월말 누계, 총투자기준) 174건, 2,752,154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경제성장률	6.1	3.2	7.4	2.6	-2.5
소비자물가상승률	7.7	7.8	11.1	16.3	17.5
재정수지/GDP	-1.3	-2.3	-2.3	-3.6	-3.1

자료: IMF, EU

2019년 터키 경제는 대내외적 불확실성 고조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 전망

- 터키 정부의 미국인 앤드루 브런슨 목사 억류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자, 미국 정부는 2018년 8월 13일부로 터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율을 2배 인상(각각 50% 및 20% 부과)하는 경제제재를 단행한 결과 당해년도 터키 철강제품의 대미 수출이 48%나 급감하는 등의 여파로 터키 경제의 2018년 성장률은 전년 (7.4%)보다 둔화된 2.6%에 그쳤음.
- 터키 경제에서 철강산업의 기여도는 4위에 해당하여, 대미 철강 수출의 감소는 터키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음.
- 터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했던 터키 경제는 올해 1분기 1.3%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며 침체기를 벗어남. 그러나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으로 시행된 확장적 재정정책과 국영은행 중심의 대출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전년동기 대비로는 여전히 -2.6% 마이너스 성장임.
- 한편, 부채가 많은 기업 부문의 대출여력이 감소하고 리라화 가치 변동성 확대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함에 따라 투자가 위축되어 다시 침체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됨.
- 7월 25일 터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1주일 repo 금리)를 24%에서 19.75%로 대폭 인하하였으나, 경기 침체 장기화를 감안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임.
- IHS Markit은 터키 경제에 대한 보고서(2019.8.27.자)에서 2019년 터키의 민간 소비와 산업생산이 전년대비 각각 3.1% 및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동 보고서는 소비자물가 상승 지속과 리라화 가치 불안정성이 가계소비를 위축시켜 터키의 소매 매출이 2018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0개월 연속 감소 추세를 지속한 것으로 집계하였음.¹⁾
- 이러한 상황에서 미-중 무역분쟁 지속에 따른 국제교역 위축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은행 대출 위축에 따른 국내총투자 부진, 그리고 에르도안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고조에 따른 리라화 가치 불안과 그로 인한 투자자들의 불안심리 등 대내외적 악재까지 겹쳐 2019년 터키 경제는 -2%대의 마이너스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1) IHS Markit, Global Economics Profile - Turkey (2019-08-27).

국내경제

- 터키 공화국 건국 100주년인 2023년 완공을 목표로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임에도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전망되는 것은 터키 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려됨.

* 보스포루스 해협의 대형 선박 통과 정체 해소를 위한 대운하 건설(약 200억 달러), 이스탄불 3층 해저터널 건설(약 35억 달러), 이즈미르 베이 크로싱(총연장 12.2km 규모 도로·터널 건설, 약 30억 달러) 등의 프로젝트 발주 계획

리라화 약세 지속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 상승 지속 전망

- 터키 정부의 미국인 브런슨 목사 억류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자, 미국 정부는 2018년 8월 13일부로 터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율을 2배 인상하여 각각 50% 및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제제재를 단행하였음.
- 미국의 경제제재로 실물경제가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서 리라화 가치가 폭락, 2018년 8월 미 달러 대비 리라화 가치가 연초대비 약 92% 폭락하는 환율 대란이 발생하며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2018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대비 5.2% 포인트 상승한 16.3%를 기록하였음.
- 2019년에도 에르도안 대통령의 노골적인 중앙은행 독립성 침해,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미국과의 관계 악화 등이 리라화 가치 하락을 촉발하였으며, 이는 외국인자금의 유출로 이어져 리라화 가치의 추가적인 하락을 초래하여 수입물가 상승을 가속화함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두 자릿수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리라화 가치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중앙은행 독립성 침해 지속 우려, 민간 부문의 높은 단기대외차입 비중, 외환보유액 및 외국인투자 포트폴리오 유입의 감소 전망 등으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우려됨.

[그림 1] 최근 5년 간 미 달러 대비 리라화 환율 변동 추이



자료: xe.com (조회일자: 2019.9.27.)

국내경제

세수 증가 부진과 선거용 감세 조치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 지속... 정부는 중앙은행 준비금으로 재정적자 충당

- 재정수지 적자는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증가 부진에 더하여 3월의 전국 지방선거 및 이와 관련된 정부의 선심성 감세 조치 등으로 인해 증가 일로에 있으며, 금년 1~4월 중 누적 재정수지 적자가 이미 연말 목표치의 약 68%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
- GDP 대비 정부의 재정수입 비중은 2016년 말 32.8%에서 2018년 말 31.2%로 위축되었으며, 2019년 말에도 30.9%로 위축될 전망이다.
- 한편, 터키 정부는 8월 15일 99억 리라 규모의 재정 흑자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세수 증가나 정부지출 감소에서 온 것이 아니라 220억 리라(39.4억 달러) 상당 규모의 자금이 중앙은행에서 재무부로 유입된 결과임.
- 터키 정부는 계속되는 경기 둔화와 세수 감소로 인해 증가 일로에 있는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긴급 상황에 대비코자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400억 리라 상당의 법정준비금인 Lira Reserve Fund를 재무부가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동 법안이 여당인 정의개발당(AKP)의 주도로 통과됨에 따라 법정준비금이 재무부로 이전됨.
- 중앙은행으로부터의 현금 유입을 제외할 경우, 터키의 재정수지는 120억 리라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됨. 아울러 7월 기준 세수는 7.3% 증가하였으나, 소비자물가상승률(16.7%) 감안시 실질 세수는 지난 10년 간 최장 기록인 7개월 연속 감소 추세를 이어나갔음.
- 따라서 중앙은행으로부터의 편법적인 자금 유입은 재정수지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Bloomberg는 금년 말 터키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 -3.7%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경 상 수 지	-32,145	-33,139	-47,347	-27,125	-910
경상수지/GDP	-3.8	-3.8	-5.6	-3.5	-0.1
상 품 수 지	-48,128	-40,892	-58,955	-41,811	-18,867
상 품 수 출	151,970	150,161	166,159	174,601	180,317
상 품 수 입	200,098	191,053	225,114	216,412	199,184
외 환 보 유 액	91,426	90,604	82,579	71,367	68,742
총 외 채	399,966	409,016	454,725	459,601	432,572
총외채잔액/GDP	46.5	47.4	53.4	60.0	61.3
D.S.R.	20.5	33.4	32.4	32.3	29.7

자료: IMF, EIU

상품수지 개선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감소할 전망이나, 미국과 EU의 무역규제는 철강 수출에 악영향

- 2018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리라화 약세는 수입품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여 수입품 수요를 위축시키는 한편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증대시켜, 2019년에는 상품수지 적자 규모가 전년대비 개선됨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도 2018년 -3.5%에서 2019년에는 균형 달성에 가까운 -0.1%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추정됨.
- 다만, EU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철강 보호무역 강화로 대미 수출이 위축된 외국산 철강의 급격한 EU 시장 유입 증가를 막고자 지난 2월 철강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바 있는데, 8월 14일 본 세이프가드 조치를 강화하는 운용방안을 WTO에 통보함에 따라 터키의 대EU 철강 수출이 금년 하반기부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임.
- 미국은 2017년까지 터키산 철강의 최대 수입국이었으나, 2018년에 브런슨 목사 사건으로 미국이 터키산 철강에 대한 관세율을 50%로 2배 인상한 결과 미국의 당해년도 터키산 철강 수입액이 전년대비 48%나 급감하였음.
- 이로 인해 발생한 잉여물량이 EU 시장으로 몰려 EU의 당해년도 터키산 철강 수입액이 전년대비 80%나 증가하자, EU는 지난 2월 시행 첫 해 기준 2015~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를 초과하는 물량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였음.

대외거래

- 미국 정부가 5월 16일부로 터키산 철강에 대한 관세율을 경제제재 이전 수준인 25%로 환원하였으나, 이번에는 EU가 세이프가드를 강화하면서 터키산 철강의 수출길이 좁아짐. 터키에서 생산되는 철강은 대부분 국내 수요가 없고 수출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터키 경제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음.
- 한편, 미국 정부는 개도국에 대한 관세혜택인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터키에 대한 적용을 5월 17일부터 종료한다고 발표하여 터키의 대미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됨.

경상수지 적자 지속으로 외환보유액 감소 추세

- 경상수지 적자 지속으로 외환보유액이 감소 추세를 지속하여, 2016년 월평균수입액의 약 4.8개월분에서 2018년에는 3.3개월분으로 위축되었으며, 2019년에도 2018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 전망임.
- 행정부에 의한 중앙은행의 독립성 침해는 터키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터키의 외환보유액 증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 터키 정부는 5월 15일 외환거래시 외환판매자에게 거래액의 0.1%의 외환거래세(BSMV)를 부과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음. (단, 은행 간 거래, 터키 재무부가 거래당사자인 거래, 외환부채를 은행 앞 상환하는 거래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외환거래세는 1998년 역외계좌를 통한 환투기 등의 부작용 근절을 위해 1998년 도입되었으나, 2008년부터 제로(0) 세율을 유지하다 약 11년 만에 부활하였음.
- 외환거래세 부과는 환투기 차단 및 외화수요 억제를 통해 리라화 가치 하락을 억제하는 동시에 부족한 세수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해석되나, 장기적으로는 외국인투자자의 대 터키 투자이익 저해 등으로 경제성장과 외환보유액에 모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됨.

외채상환능력

외채규모 증가 추세 지속, 외채건전성도 악화

- 지속적인 쌍둥이 적자의 보전을 위한 대외차입 증가로 인해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 및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이 모두 증가 추세를 유지하여 2018년 각각 60.0% 및 163.7%를 기록한 데 이어 2019년에도 각각 61.3% 및 169.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D.S.R.도 IMF와 세계은행에서 권장하는 수준인 18~20%를 지속적으로 초과하여, 2018년 32.3%에 이어 2019년에도 29.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리라화 약세 지속으로 외채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터키의 외채건전성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음.

구조적취약성

단순 조립 저부가가치 중심의 제조업 구조

- 터키 정부가 적극적인 제조업 육성정책과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을 추진한 결과 현대자동차, 포드, 르노, 도요타, 폭스바겐 등 자동차 부문, LG전자 등 전기·전자 부문의 세계적인 기업들이 유럽 지역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생산공장을 터키에 두고 있어, 현재 터키는 '유럽의 공장'으로 불리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터키 소재 외국 제조기업은 자국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하고 터키의 생산공장에서 이를 조립하여 유럽에 수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제조업 중 외국기업이 주도하는 부문은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 단순 조립 중심의 저부가가치 제조업이라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

높은 수준의 에너지 수입의존도

- 에너지원인 원유와 천연가스를 이란, 러시아 등으로부터의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함에 따라 산업경쟁력과 물가수준이 크게 영향을 받으며, 높은 에너지 수입비중은 경상수지 적자를 가중시키고 있음.
- 원유·천연가스 수입액은 터키 전체 상품수입액의 10% 이상을 점유하여, 단일 품목으로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전력수요의 약 40%를 천연가스 발전으로 충당하는 발전산업 구조도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음.

성장잠재력

지정학적 요충지로서의 이점 보유

-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이슬람 문화권 국가로 중동 국가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중동, 중앙아시아 및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 역할이 가능함.
- 아울러 이러한 지정학적 이점으로 인해 러시아와 중동의 유럽행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통과하는 에너지 수송 허브로서의 역할도 가능함.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높은 풍부한 노동력 보유

- 유럽 국가 중 독일에 이어 2위 규모에 해당하는 많은 인구(2018년 기준 81.9백만 명)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이 68%에 달하여 노동력이 풍부함.
- 이슬람 국가의 특성상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유럽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2018년 세계은행 기준 1.49%)과 출산율(2017년 세계은행 기준 가입여성 1명당 2.034명의 신생아 출산)을 기록하고 있음.

정책성과

부진한 경제성장과 두 자릿수 물가상승률 지속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 제기

- 에르도안 대통령은 자신의 사위를 재무장관에 임명하는 등 터키의 경제정책 전반에 깊숙히 간여하고 있으나, 2019년 터키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및 소비자물가상승률의 3년 연속 10%대 유지가 전망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에르도안 대통령은 특히 최근 미국, EU 등 주요 교역상대국들과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자주 초래하고, 이것이 상대국들의 경제적 보복으로 이어져 터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에르도안 대통령의 노골적인 침해는 경제불안을 초래하는 정책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 증폭

- 7월 6일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2016년 4월 임명되어 당시 잔여임기를 약 9개월 남겨둔 체틴카야 중앙은행 총재를 대통령령으로 해임하고 우이살 부총재를 신임 총재로 임명하였음.
- 체틴카야 前총재는 작년 8월 미국과의 외교 갈등으로 리라화 가치가 폭락하자 리라화 가치방어를 위해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17.75%→24%)하였고, 이후 에르도안 대통령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에 맞서 긴축적 통화정책을 유지해 왔음.
- 에르도안 대통령은 “고금리가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며, 금리를 내리면 물가 상승이 억제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음.
- 에르도안 대통령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통화정책 및 외환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 것은 오히려 터키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을 증폭시켜, 터키 주식시장과 리라화 환율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 이어 7월 25일 터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1주일 repo 금리)를 24%에서 19.75%로 대폭 인하하였음. 작년 8월 미국인 목사 투옥과 관세 갈등 등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터키 리라화 가치가 폭락하자, 중앙은행은 리라화 가치 방어를 위해 9월 기준금리를 6.25% 포인트 인상을 24%로 조정한 이후 계속 동결해 왔음.
- 금번 기준금리 인하는 결국 우이살 총재가 경기부양을 원하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요구에 순응한 결과로 관측됨.
- 한편, 기준금리 인하 후 2개월도 경과하기 전인 9월 13일 터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16.5%로 추가 인하하였음. 터키 중앙은행은 경기 회복 및 물가상승률 전망 개선을 기준금리 추가 인하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 또한 에르도안 대통령의 추가 금리 인하 요구에 순응한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함. 시장에서는 터키 중앙은행이 추후 기준금리를 10%대 초반까지 계속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정치동향

에르도안 대통령, 제왕적 독재자로 군림하며 장기 집권 도모로 국내외의 비난에 직면

- 이스탄불 시장(1994~98년)과 국무총리(2003~14년)를 거쳐 2014년 8월 집권, 2018년 6월 조기 대선을 통해 재선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 공화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케말 아타튀르크 초대 대통령이 확립한 정교 분리의 세속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이슬람주의를 내세워 종교적 보수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확보하고 있음.
- 아울러 에르도안 대통령은 2017년 4월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 개정을 통해 권한이 대폭 강화된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를 도입한 뒤 장기 집권을 도모하며 독재자로서의 면모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어 국내외의 비난을 받고 있음.
- 개헌의 주요 내용은 총리직을 폐지하고 대신 부총리직을 신설하며, 5년 임기의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 행정명령 발효, 의회의 승인 없이 부통령과 장관 임명, 국가비상사태 선포 등의 권리는 물론 판·검사 등 사법부 인사권까지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절대 권력을 허용하고 3권 분립의 의미를 퇴색시켰음.
- 또한 대통령은 대선 및 총선을 조기 시행할 권한을 갖고, 대선 승리 시 중임할 수 있으며, 중임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 조기 대선에 또 출마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에르도안 대통령은 2018년 6월 조기 대선 승리로 중임 조항에 따라 2028년까지 집권이 가능해졌으며, 임기 만료 직전에 조기 대선을 다시 실시할 경우 2033년까지 재임할 수 있음.
- 에르도안 대통령은 자신의 사위인 베라트 알바이락을 재무장관에 임명한 데 이어 작년 10월 29일 개항한 이스탄불 신공항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려고 시도하는 전형적인 독재자 성향을 보였으나, 스스로를 국부(國父) 아타튀르크와 동일시하려는 의도라는 여론의 반발에 결국 철회하였음.
- 에르도안 대통령은 2016년 7월 발생하였으나 6시간 만에 진압된 군부 쿠데타를 계기로 정부기관, 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 자신의 반대파로 분류된 이들에게 쿠데타 가담 혐의를 씌워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벌여 사법부와 군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3권 분립의 침해를 자행하고 있음.

2018년 6월 총선 결과 여권 연대가 의회 의석의 57.5%를 차지

- 에르도안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자 여당인 정의개발당(AKP)은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민족주의자운동당(MHP)과 함께 이슬람주의에 기반한 보수 성향의 여권 연대 People's Alliance를 구성하고 있음.
- 한편, 중도좌파 공화인민당(CHP)은 2017년 11월 창당한 중도우파 좋은당(IYI)과 함께 야권 연대인 Nation Alliance를 구성하고 있으며, 친(親)쿠르드족 성향의 인민민주당(HDP)도 의회에 진출해 있음.
- 2018년 6월의 총선 결과 터키 의회(총 600석)는 People's Alliance가 344석(AKP 295석 + MHP 49석)으로 과반수인 57.3%를 차지하였으나, 이는 직전 선거 결과인 357석보다 13석 감소한 것임. 한편, Nation Alliance는 직전 선거보다 55석 증가한 189석(CHP 146석 + IYI 43석)으로 31.5%를 차지하였으며, 단독으로 선거에 임한 HDP는 직전 선거보다 8석 증가한 67석을 얻어 11.2%를 차지하였음.

정치동향

3월 지방선거에서 여권 연대가 우위를 유지하였으나, 주요 5대 도시 시장직은 야당이 석권

- 3월 31일 실시된 전국 지방선거 결과 AKP와 MHP의 여권 연대 People's Alliance가 전체의 51.67%(AKP 44.42%, MHP 7.25%)를 득표하며 기존의 우위를 계속 유지하였음. 한편, CHP와 IYI의 야권 연대 Nation Alliance는 37.53%(CHP 30.07%, IYI 7.46%)를 득표하였음.
- 아울러 여타 정당과의 연합 없이 단독으로 선거에 나선 HDP는 쿠르드족이 밀집한 동부 지역에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결과 4.22%를 득표하였으며, 기타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은 6.58% 득표에 그쳤음.
- 81개 자치단체 주도(province capital) 시장 선거에서는 AKP가 39개, CHP가 21개, MHP가 11개, HDP가 8개, TKP(터키공산당)가 1개, 무소속 후보가 1개 도시의 시장직을 각각 획득하였음.
- 그러나 야당인 CHP 후보들이 수도 앙카라, 최대 도시 이스탄불, 이즈미르, 안탈리아 등 주요 5대 도시의 시장직을 석권하며 기존의 14개 도시보다 7개 증가한 21개 도시의 시장직을 차지한 반면, AKP는 기존의 47개 도시보다 8개 감소한 39개 도시의 시장직을 차지하는 데 그쳤음.
- 앙카라 시장직은 1994년 이후 25년 만에 정의개발당 후보가 낙선하였음. 이즈미르는 CHP가 시장직을 유지하였으며, 안탈리아는 CHP가 AKP로부터 시장직을 탈환하였음.
- 특히 AKP에서 CHP로 시장직이 넘어간 경우는 앙카라, 이스탄불, 안탈리아 포함 8개 도시인 반면, CHP에서 AKP로 시장직이 넘어간 경우는 2개 도시에 불과하였음.

이스탄불 시장 선거, 에르도안 대통령의 압력으로 결과 무효화 및 재선거 실시

- 최대 도시이자 터키 민심의 향배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으로 평가되는 이스탄불 시장 선거는 개표율이 98.8%인 상태에서 개표가 중단되고, AKP의 비날리 이올드름 후보가 승리를 선언하는 등 부정선거 의혹이 짙은 상황에서 개표가 재개된 결과 CHP의 에크렘 이마모올루 후보가 약 14,000표를 더 득표하여 0.16% 포인트 차이인 48.77% 득표로 승리하였음.
- 에르도안 대통령이 1994년 이스탄불 시장에 당선된 이후 25년 간 AKP이 독식해온 이스탄불 시장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한 것은 리라화 가치 하락 등 경제위기, 미국과의 정치적 긴장감 고조에 따른 우려, 그리고 무엇보다 장기 독재를 추구하는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한 민심 이반의 결과로 분석됨.
- 그러나 이스탄불 시장으로 정치 경력을 시작하여 이스탄불을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여겨온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스탄불 시장 선거에서 AKP가 25년 만에 야당 후보에 패배한 데 대해 충격을 받아, 선거 부정을 주장하며 터키 최고선거위원회(YSK)를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압박하였음.
- AKP는 조작 등 부정투표를 주장하며 YSK에 재검표를 요구하였으나, 재검표 결과도 이마모올루 후보의 승리가 확실해지자 非공무원이 개표감시위원으로 활동해 선거관계법령을 위반했다며 YSK에 선거 무효화를 요구하였음. 이에 5월 6일 YSK는 이스탄불 시장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명령하여 전형적인 독재국가적 행태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음.

정치동향

이스탄불 시장 재선거 결과 오히려 CHP 후보의 득표율이 상승하며 승리 확정, 에르도안 대통령에 정치적 타격의 부메랑

- 4월 17일 이스탄불 시장으로 취임하여 업무를 시작한 이마모을루 시장은 5월 6일 YSK의 이스탄불 시장 선거 결과 무효화 및 재선거 명령에 따라 당선이 취소되고, 6월 23일 재선거가 실시되었음. 그러나 재선거 결과 이마모을루 후보가 54.21%를 득표하여 44.99%를 득표한 이을드름 후보에 오히려 앞서보다 더 큰 격차인 9.22% 포인트 앞서며 승리를 확정, 6월 27일 이스탄불 시장으로 다시 취임하였음.
- 금번 선거의 두 후보 간 득표율 차이는 지난 3월 치러진 선거의 두 후보 간 득표율 차이의 57.6배로, 투표자 수와 유효투표 수 모두 6월 재선거가 3월 선거를 앞질러 재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과 열기가 더욱 높았음을 보여줌.
- 이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부당한 압력으로 3월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강요하여 이스탄불 시민들의 반발을 초래한 결과 자신과 집권 여당에게 더 큰 타격을 안겨준 부메랑이자 자업자득으로 평가됨.

구 분		2019.3.31.자 선거	2019.6.17.자 재선거
등록 유권자		10,570,939	10,570,354
실제 투표자		8,865,086	8,925,063
유효투표		8,549,838	8,746,464
무효투표		315,248	178,599
득표 수	이마모을루 후보(CHP)	4,169,765(48.77%)	4,741,868(54.21%)
	이을드름 후보(AKP)	4,156,036(48.61%)	3,935,453(44.99%)
	기타 군소 후보	224,037(2.62%)	69,143(0.79%)
1,2위 후보 득표 차이		13,729(0.16%)	806,415(9.22%)

AKP 창당 주역의 탈당으로 집권세력 분열 조짐

- 에르도안 대통령과 함께 집권 여당 AKP를 창당한 주역이자 경제장관, 외무장관, 부총리를 역임한 바 있는 유력 정치인인 알리 바바잔은 7월 8일 "자신이 믿는 원칙·가치·이상과 현 정부의 각 분야 정책 간의 심각한 차이"를 이유로 AKP를 탈당한다고 공식 발표하였음.
- 바바잔을 비롯하여 AKP 내에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제왕적 대통령제 전환과 권력 장악, 3권 분립 약화, 과도한 종교적 보수주의 등에 부정적인 인사들이 존재하며, 이들을 중심으로 탈당 및 신당 창당의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집권세력의 분열이 표면화될 것으로 전망됨.
- 터키 언론은 AKP의 또다른 주역이자 총리 및 대통령을 역임한 압둘라 귤 역시 바바잔의 신당 프로젝트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정치동향

중앙정부, 8월 친(親)쿠르드 성향의 HDP 소속 시장 3명 해임

- 터키 내무부는 8월 19일 성명을 통해 터키 동-남부에 위치한 3개 도시인 디야르바크르 시(남동부 디야르바크르 주의 주도)의 아드난 셀추 므즈라크르 시장과 마르딘 시(남동부 마르딘 주의 주도)의 아흐메트 튀르크 시장, 반 시(동부 반 호수 동쪽 연안의 도시)의 베디아 외즈곡체 에르탄 시장을 해임하고 각 시가 소속된 주의 도지사가 시장직을 겸임한다고 발표하였음.
- 내무부는 성명에서 이들이 쿠르드족 분리·독립주의 테러 단체인 쿠르드노동자당(PKK)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아울러 테러리스트의 장례식에 참석하거나 거리에 테러 조직원의 이름을 붙이는 등 테러 단체를 선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됐다고 해임 사유를 설명하였음.
- 이들은 모두 친(親)쿠르드계인 인민민주당(HDP) 소속으로 지난 3월 지방선거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디야르바크르 시장은 63%, 마르딘 시장은 56%, 반 시장은 54%) 민선 시장에 당선되었으나 5개월 만에 시장직을 박탈당하였음.
- 터키 정부와 여당은 3월 지방선거에서 HDP가 PKK와 관련돼 있다고 비판했으나, HDP는 PKK와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음. 1978년 창설한 PKK는 쿠르드족의 분리 독립을 목표로 폭력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테러를 자행하여, 터키 정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PKK의 테러로 4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함.
- 터키 정부는 앞서 2016년 7월의 실패로 끝난 군부 쿠데타 이후에도 HDP 소속 시장 수십 명을 PKK와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해임한 바 있으며, 에르도안 대통령은 3월 지방선거 직전에 HDP 후보들과 PKK 간의 연관이 드러날 경우 이들이 당선되더라도 또 다시 해임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어 해임의 실체는 정치적 탄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스탄불 법원, 9월 CHP의 유력 여성 정치인에게 국가원수 모독 혐의로 중형 선고

- 9월 6일 이스탄불 법원은 CHP의 이스탄불 지역당 대표인 여성 정치인 카난 카프탄즈오을루에게 “테러리스트들에 동조하여 국가기관과 국가원수를 모독한 혐의”로 징역 9년 8개월 20일을 선고하였음. 법원은 카프탄즈오을루가 2012~17년 중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짐. 카프탄즈오을루는 혐의를 거듭 부인해 왔으며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음.
- 카프탄즈오을루는 3월 지방선거에서 CHP의 에크렘 이마모을루 후보의 이스탄불 시장 당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꼽히며, 이 때문에 이스탄불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안겨준 카프탄즈오을루에 대한 보복으로 법원이 에르도안 대통령의 뜻에 따라 트위터 게시물을 근거로 내세워 독재국가에서 흔히 사용되는 죄목인 국가원수 모독죄를 씌워 중형을 선고했다는 국내외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음.

사회동향

에르도안 대통령의 비상식적인 여론 억압이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

- 2016년 7월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군부 쿠데타가 6시간 만에 진압된 후 (동 쿠데타는 실제로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반대파를 축출하기 위한 정부측의 자작극이라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음) 언론·출판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탄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
- 특히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적으로 꼽히는 이슬람 성직자 펫홀라르 길렌을 연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정부가 결정한 서적을 학교와 도서관에서 현재까지 30만 권 이상 수거·소각하거나 출판을 금지하는 '터키판 분서갱유'까지 자행하는 비상식적인 여론 억압이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수거·소각된 서적들 중에는 미국의 펜실베이니아 주의 이름이 내용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이미 인쇄된 교과서 180여만 권을 전량 파기하고 새로 수정하여 인쇄하였는데, 길렌이 현재 펜실베이니아 주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음.
- 한편 2016년에는 수학 교과서 1종의 출판이 금지되었는데, 이 교과서에 실린 수학 문제들 중 'F지점에서 G지점까지'라는 문구가 길렌의 이름과 성의 첫 글자인 F와 G를 포함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음.

언론자유도는 유럽(구소련 제외) 최하위이자 전 세계에서 최하위권

- 미국 Freedom House에서 발표하는 Freedom of the Press 보고서와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에서 발표하는 World Press Freedom Index 보고서 모두 터키를 '언론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분류하고 있음.
- 터키는 Freedom of the Press 보고서와 World Press Freedom Index 보고서에서 모두 최근 5년 간 (에르도안 집권 이후) 순위가 하락을 거듭하여 유럽(구소련 제외) 최하위이자 전 세계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Freedom House의 Freedom of the Press 보고서상의 터키의 순위(최신판은 2017년)

연도	순위/전체	점수*	분류	최하위 국가
2013년	123/197위	56점	부분적 자유	북한, 투르크메니스탄(96점)
2014년	134/197위	62점	부자유	북한(97점)
2015년	142/199위	65점	부자유	북한(97점)
2016년	156/199위	71점	부자유	북한(97점)
2017년	163/199위	76점	부자유	북한(98점)

* 점수(0~100점) 구분 : 자유(0~30점) / 부분적 자유(31~60점) / 부자유(61~100점)

국경없는 기자회의 World Press Freedom Index 보고서상의 터키의 순위(최신판은 2019년)

연도	순위/전체	점수**	최하위 국가
2015년	149/180위	44.16점	에리트리아(84.86점)
2016년	151/180위	50.76점	에리트리아(84.86점)
2017년	155/180위	52.98점	북한(84.98점)
2018년	157/180위	53.50점	북한(88.87점)
2019년	157/180위	52.81점	투르크메니스탄(85.44점)

** 점수(범위는 0~100점)가 낮을수록 언론자유도는 높음.

사회동향

시리아로부터의 난민 유입으로 사회적 비용 발생

-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난민이 인접국인 터키로 대거 유입되어, 터키 내무부에 따르면 현재 터키 내에 약 365만 명의 시리아 난민이 체류하고 있음. 난민의 유입은 이들의 보호를 위한 재정지출 증가, 난민 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의 물가 상승, 그리고 터키인들에 의한 불법취업 난민의 착취 등 복잡한 문제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고 있음.
- 한편, 시리아 등지로부터 유입되는 난민들이 일자리가 집중된 이스탄불로 계속 몰려들자, 8월 22일 터키 정부는 현재 이스탄불 거주 허가를 받지 않고 이스탄불에 체류하는 난민들에게 10월 30일까지 이스탄불을 떠나 터키 입국 당시 터키 내 체류지로 등록된 곳으로 귀환하라고 명령하였음.
- 현재 이스탄불에는 54만 명 이상의 시리아 난민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스탄불 시의 관련 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의 난민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터키 정부측의 입장임. 터키 정부는 금년부터 난민들에게 이스탄불 거주를 위한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음.
- 이어 8월 28일 이스탄불 시 당국은 8월 12~25일 단속을 통해 거주 허가 없이 이스탄불에 체류하던 난민 16,423명 및 이민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시리아 출신 불법이민자 4,500여명을 적발하여 임시 보호소로 이송했다고 발표하였음.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쿠르드족 주민 문제는 안보의 지속적인 아킬레스건으로 작용

- 1978년 창설된 터키 내 쿠르드족 조직인 쿠르드노동자당(PKK)은 터키 남동부와 이라크 북부 산악지대를 본거지로 삼고 테러 활동을 통한 쿠르드족의 분리독립을 추구하여, 터키 정부에 의하면 현재까지 4만 명 이상의 터키 군인·민간인이 PKK의 테러 공격으로 사망하였음.
- 세계 최대의 유랑민족(인구 약 3,000만 명)인 쿠르드족은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에 분포해 있으며, 터키 남부에 가장 많은 1,500만 명 이상이 거주하여 터키 내 최대 소수민족임.
- PKK는 현재 터키는 물론 미국과 EU에 의해 테러 조직으로 분류되어 있음.
- 이에 터키군은 PKK 소탕을 위한 군사작전을 지속적으로 벌여 왔으며, 지난 5월과 7월에도 이라크 북부에서 PKK 전투원들의 자국 침투를 막기 위한 '발톱 작전'을 벌였음. 아울러 이라크 북부 지역의 쿠르드족 군사조직과 내전이 지속 중인 시리아 내의 쿠르드 민병대에 대해서도 군사 공격을 감행하고 있음.
- 터키 정부는 향후에도 쿠르드족 문제에 대해 강경 대응으로 일관할 것으로 예측되나, 독자적인 민족 국가 수립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쿠르드족의 존재는 터키의 안보에 계속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제관계

브런슨 목사 구금 사건, 러시아제 방공 체계 도입 등으로 미국과의 관계 악화

- 터키 정부는 미국인 앤드루 브런슨 목사가 에르도안 대통령의 최대 정적(政敵)으로 꼽히는 이슬람 성직자 펫홀라르 귄렌(현재 미국에 망명 중) 및 터키 정부가 테러조직으로 규정한 쿠르드노동자당(PPK)과 결탁하여, 정치적·군사적 기밀로 분류된 국가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2016년 7월 발생하였으나 실패로 끝난 터키 군사 쿠데타를 지원하였다고 주장하였음.
- 터키의 이즈미르에 부인과 함께 20년 간 거주하며 개신교회를 운영해온 브런슨 목사는 2016년 10월 터키 경찰에 체포, 구금되어 간첩 및 테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터키 검찰은 그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하였음.
- 그러나 개신교 목회자인 브런슨 목사가 이슬람 성직자인 귄렌과 결탁하여 터키 정부의 전복을 도모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실제로는 미국에 망명 중인 귄렌을 송환하라는 에르도안 정부의 요구를 미국 정부가 거절하자 귄렌과 맞교환하기 위한 일종의 인질로 브런슨 목사를 체포, 구금했다는 분석이 우세함.
- 아울러 이슬람 근본주의를 내세운 에르도안 정부를 지지하는 종교적 보수층의 타 종교(특히 카톨릭, 개신교 등 그리스도교 종파들)에 대한 적대감도 부분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미국 정부가 그의 석방을 요구하며 터키에 대해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율 대폭 인상 등 경제제재를 발동하자, 터키 법원이 2018년 10월 그의 석방을 결정함에 따라 브런슨 목사는 구금 2년 만에 석방되어 미국으로 귀국하였음.
- 그러나 이후에도 터키 정부는 미국의 대 이란 경제제재 복원에 반대하며 이란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역시 경제제재로 미국과 대립 중인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방공 시스템을 도입을 결정하는 등 미국과의 관계는 회복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음.
- 터키 정부가 7월 12일 러시아제 미사일 방공 시스템 도입을 강행하자, 미국 정부는 터키가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동료 회원국임에도 NATO의 최대 적인 러시아의 무기체계를 도입한 데 반발하여 7월 16일 터키를 자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 프로그램에서 배제하였음. 이에 터키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조치가 불공정하다고 반발하였음.
- 터키는 그동안 미국의 동맹국의 일원으로서 F-35 기종의 생산에 조력하고 구매를 미리 계획한 바 있으나, 미국은 터키가 S-400과 F-35를 동시에 운용할 경우 F-35의 민감한 정보체계가 S-400에 연동된 네트워크를 통해 러시아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여 터키를 F-35 프로그램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에 따라 미국은 F-35의 대 터키 판매를 금지하고, 미국에서 동 프로그램에 참여해온 터키 공군 조종사들과 엔지니어들을 출국시키며, NATO 회원국들의 부품 공급망에서 터키를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음. 터키는 F-35 부품 중 900개 이상을 국내에서 생산해 왔음. 다만, 미국은 제외 조치가 '당분간' 적용된다고 덧붙임으로써 터키의 F-35 프로그램 복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국제관계

최근 키프로스 해역에서의 천연가스 시추 문제 등으로 EU와의 관계도 악화 일로

- EU는 유럽으로 대거 유입된 중동 지역 난민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에 따라 터키와 협력해 왔으나, 2016년 7월의 쿠데타 불발 이후 반대 세력의 숙청과 여론 억압, 사형제 재도입 등 에르도안 행정부의 비민주적 행태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EU 집행위원회가 2016년 11월 14일자로 터키의 EU 가입에 대한 심사를 중단한 이후 EU와의 관계도 악화되고 있음.
- 에르도안 대통령은 특히 인권, 정교분리,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 등을 계속 거론하며 자신을 압박하는 EU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어, 터키의 EU 가입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고 있음.
- 최근 터키는 지중해 동부의 섬나라 키프로스 북부 해역에서의 천연가스 시추 문제로 EU와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음. 1974년 이후 키프로스의 남북 분단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부의 키프로스 공화국²⁾이 프랑스 Total, 이탈리아 Eni, 미국 ExxonMobil 등 서방 에너지 기업들과 손잡고 인근 해역에서 천연가스 개발³⁾을 추진하여 2017년 7월 가스전 탐사 시추를 개시하자, 북부를 지원하는 터키는 이에 반발하여 군사적 개입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하였음.⁴⁾
- 실제로 2018년 2월 터키 해군이 키프로스 해역으로 이동하던 Eni의 가스 시추선을 군함을 동원하여 저지하였으며, 동년 11월 터키 정부는 이 해역에서 서방 기업들의 자원 탐사를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위협의 강도를 높인 데 이어 올해 2월 키프로스 해역에서 독자적으로 가스 시추 작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음.
- 터키는 지난 5월 3일 북부 키프로스 정부의 승인을 받아 북부 키프로스 주변 해역에서 가스 시추를 개시한다고 발표하였음. 이에 키프로스와 그리스, EU는 즉각 반발하며 터키의 행위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제재조치를 취하였으나, 터키는 8월 두 번째 시추 작업 개시를 강행한 데 이어 세 번째 시추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EU와의 관계가 악화 일로에 있음.
- EU는 7월 15일 터키와의 종합 항공운송 협정 체결 협상 중단, 유럽투자은행(EIB)의 터키 내 대출 관련 사항 전면 재검토 요청, 터키의 EU 가입 지원을 위해 내년에 터키 내 정치개혁과 농업개발 등의 프로젝트에 배정한 1억 4,480만 유로의 지원금 삭감 등의 제재조치를 가하였음.

2) 키프로스는 1960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후 남부의 그리스계 주민과 북부의 터키계 주민 간의 갈등이 지속되던 중 1974년 7월 그리스와의 합병을 주장하는 그리스계 육군 장교들의 주도로 쿠데타가 발생하자, 터키는 터키계 주민들의 보호를 명분으로 키프로스를 침공하여 북부를 점령한 결과 8월 남북으로 분단되었음. 이듬해인 1975년 북부가 자체적인 대통령을 선출한 데 이어 1983년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TRNC)이라는 국명으로 독립을 선언한 이래 키프로스는 분단 상태를 지속하고 있음. 현재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남부의 키프로스 공화국만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며, 1974년 침공 당시부터 현재까지 자국 군대를 TRNC에 주둔시키고 있는 터키 정부만이 TRNC를 정식 국가로 인정하고 있음.

한편, 키프로스 공화국은 2004년 5월 1일 EU 회원국이 되었고 2008년 1월 1일부로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국가가 되었음. 남-북 키프로스는 2015년 UN의 중재로 통일 협상을 시작하여 연방제 통일 방안을 도출하였으나, 남부가 북부에 주둔한 약 35,000명의 터키군의 철수를 통일 조건으로 고수하고 북부가 이를 거부하여 결국 2017년 1월 협상이 한 차례 결렬된 바 있음.

3) 에너지 컨설팅 기업 Wood MacKenzie는 지중해 동부 해저에 약 3.5조 m³ 규모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는 지난 10년 간 전 세계에서 새로 확인된 가스전 중 최대 규모이나, 관련국들 간의 영해(領海) 분쟁 등으로 개발이 저조한 상태임.

4) 키프로스 공화국 정부에 의하면, 터키 정부는 키프로스 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키프로스 EEZ의 44%를 자국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TRNC도 나머지의 25%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국제관계

러시아와는 S-400 방공 시스템 도입 등으로 상호 밀착 가속화

- 터키는 러시아 세력의 서진(西進) 및 남하(南下)를 저지하기 위해 창설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회원국으로 미국의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역시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통해 상호 밀착하고 있음.
- 터키 정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의 구매를 추진하였으나, 오바마 행정부가 터키 정부의 기술이전 요구에 난색을 보여 구매가 무산되자 2017년 4월 러시아 정부와 S-400 미사일 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미국의 강한 반발을 초래하였음.
- 터키는 지난 7월 12~25일에 걸쳐 러시아로부터 S-400 1차분을 인수한 데 이어 8월 27일 2차분 인수를 개시하였음. 한편, 터키 국방부는 9월 4일 터키 공군 요원들이 러시아에서 진행 중인 S-400 운영 훈련에 참여했다고 밝혔음.
- 에르도안 대통령은 8월 30일 앙카라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이 터키에 F-35 판매를 계속 거부한다면 러시아제 수호이 전투기(SU-35 또는 SU-57)을 대신 구매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터키와 러시아 간의 상호 밀착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됨.

이란과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 유지

- 터키와 이란은 과거 오토만 투르크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시절부터 전통적으로 중동 지역의 패권을 놓고 다투는 등 정치적 현안에서 상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특히 미국 정부가 이란 핵협정(JCPO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며 대 이란 경제제재를 복원하고, 브렌슨 목사 억류 사건 등으로 인한 외교적 마찰로 터키에도 경제제재를 가하면서 터키와 이란 간의 상호 밀착이 가속화됨.
- 터키는 에너지 수요 부족분을 이란으로부터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수입하고, 이란은 미국의 제재를 피하는 우회로로 터키를 이용하고 있음.
- 지난 3월 이란 국영가스공사는 터키 정부가 이란에 천연가스 수출규모 증대를 요청했다고 밝혔음. 이란은 지난 2001년부터 연간 평균 3,530억 ft³ 규모의 천연가스를 터키에 수출해 왔음.
- 6월 21일 메블뤼트 차오쇼을루 터키 외무장관과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의 이스파한에서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협약에 서명하였음.
- 이어 8월 7일 이란 테헤란과 터키 앙카라를 왕복하는 완행열차 노선 운행이 4년 만에 재개되었음. 동 노선은 2015년 7월 터키 남동부에서 기차를 겨냥한 폭발물 공격 발생으로 운행이 중단되었으며, 당시 터키 정부와 이란 정부 모두 쿠르드노동자당(PKK)을 테러의 주체로 지목하였음.

국제관계

카슈끄지 암살 사건을 계기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악화

- 터키 정부가 작년 10월 자국 내에서 발생한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사건 당시 암살을 계획하고 지시한 인물로 지목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집요하게 압박한 데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숙적인 이란과의 관계를 강화하자, 사우디아라비아는 투자 중단, 교역 축소, 자국 관광객의 터키 방문 제한 등 터키에 대한 경제보복을 추진하여 관계가 악화되고 있음.
- 지난 8월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될 터키산 섬유, 화학제품을 실은 터키 화물 트럭 80여대의 사우디아라비아 입국이 거부되고, 제다에서는 터키산 채소, 과일을 실은 300여개의 화물 컨테이너의 하역이 지연되었음. 한편, 금년 상반기 중 터키를 방문한 사우디 관광객은 전년동기(27.6만 명) 대비 15.1% 감소한 23.4만 명으로 집계되었음.

쿠르드족 문제를 놓고 이라크와 갈등 지속

- 터키는 자국 내 쿠르드족 분리주의 조직이 이라크 등 인접국들에 거주하는 쿠르드족 주민들과 연대하여 분리 독립을 위한 무력 투쟁을 벌일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이라크의 쿠르드족 군사조직과의 연계를 저지코자 이라크 영토 내에 불법적인 군대 주둔 및 미사일 공격 등을 감행하여 이라크와 갈등을 지속하고 있음.

외채상환태도

2018.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연체비율은 0.08%에 불과

- 2018.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의 터키에 대한 원리금 잔액은 329억 1,570만 달러(단기 59억 5,550만 달러, 중장기 269억 6,020만 달러)이며, 이중 연체액은 중장기 2,780만 달러로 전체 잔액의 0.08%에 불과함.
- 동 연체금액은 전쟁, 내전 등 정치적 리스크에 의한 ECA 원리금 연체 상황만을 반영함.
- 2018.9월 말 기준 IMF와 세계은행에 대한 연체액은 없음.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5등급 (2019.02)	5등급 (2018.06)
Moody's	B1 (2019.06)	Ba3 (2018.08)
Fitch	BB- (2019.07)	BB (2018.07)

Moody's와 Fitch, 6~7월 터키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

- 6월 14일 Moody's는 터키의 경상수지 적자 누적과 그로 인한 외환보유고 감소 등에 따른 채무불이행 위험 증가 등을 이유로 터키의 국가신용등급을 Ba3에서 B1으로 하향 조정하였음.
- Moody's는 2018년 3월과 8월에도 터키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 : Ba1 → Ba2('18.3) → Ba3('18.8)
- 이어 7월 12일 Fitch도 중앙은행 총재 해임으로 나타난 터키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과 그로 인한 투자자 신뢰 하락 등을 이유로 터키의 국가신용등급을 BB에서 BB-로 하향 조정하였음.

-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른 세계경기 위축, 미국과 EU의 대 터키 경제제재 등 외부적 요인과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을 비롯한 에르도안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고조 등 내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리라화 가치 불안과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2019년 터키 경제는 -2%대 중반의 마이너스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 에르도안 대통령이 헌법 개정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3권 분립을 침해하며 언론 자유를 억압하고 야당 정치인을 탄압하는 등 독재 정치를 노골적으로 추구함에 따라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이 가중됨. 이는 지난 3월 지방선거에서 앙카라, 이스탄불, 이즈미르 등 주요 지자체장직을 야당이 석권하는 결과를 낳았음.
- 브런슨 목사 억류 사건, 러시아제 방공 미사일 체계 도입, 키프로스 해역에서의 천연가스 시추 등의 문제로 인해 미국, EU와의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으며, 이는 터키에 대한 미국과 EU의 경제제재 등을 초래하여 불확실성 증폭의 요인이 되고 있음.